

대중속으로... 진보정당, 변화의 몸부림

진보정의·진보신당, 당명·당헌 개정 고강도 구조조정

통합진보, 29~30일 광주서 '진보민주주의' 결의문 채택

존립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진보정당들이 좌표 재설정에 나섰다. 지난 총·대선을 거치며 좁혀진 입지를 넓히고 멀어진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재기의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명과 당헌 개정 등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구조조정은 물론 이념적 성향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 새로운 정체성 찾기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들 정당의 새로운 선택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나아가 '안철수 신당'에 어떤 영향을 미쳐 향후 변화될 정치지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과 강동원 의원의 탈당 등으로 의석수 4석의 원내 4당으로 내려앉은 진보정의당의 변화 몸부림이 가장 거세다. 진보정의당은 일단 복유립식 '사회민주주의'로 초점을 맞추고 변화의 틀을 맞추고 있다. 새 당명도 사회민주당, 정의당, 민들레당 등으로 압축된 3개 안 중에서 사회민주당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따라다녔던 '중복' 꼬리표를 떼 동시에 복유

립 사회민주주의를 모델로 한 대중정당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창당을 준비하는 진보신당도 19

일까지 노동당과 녹색사회노동당, 좌파당 등 새 당명후보를 놓고 당원 전 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노동당이라는 당명이 소수의 가치를 배제할 수 있고, 좌파당이 한국사회에서 대중성을 가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복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진

보당은 지난 17일 당헌 개정을 통해 당의 지향점을 '진보적 민주주의'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전날 중앙위원회 결과를 전하며 "당헌개정을 통해 진보당이 추구하는 가치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당대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지난 2003년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류로 올라선 소위 자주파(NL)가 당 강령에 명시 시도했다가, 당내 경등파(PD)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개념이다. 경등파와 갈라서고 나서야 10년 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보정의당 정치혁신특위 주최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가 심상정 진보정의당 정치혁신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심상정 의원, 조현연 진보정의당 연구소장, 이인영 민주당 의원, 송호창,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효석 "시·도지사 출마 검토"

내년 지방선거 광주·전남서 '안철수 신당' 후보로

민주당 김효석 전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후보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달 말부터 광주·전남지역 발전 구상 만들기에 나서기로 해 출마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내년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선거구도는 어느 해 지방선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18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에게 훌륭한 시·도지사를 선택할 권한을 쥐어준다"면서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자주 만나면서 정치적 입장과 서로 향후 정치 행보에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 그동안 민주당의 폐쇄적 구조를 비판하면서 당의 공식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지역위원장 출마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안철수 신당' 후보로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구당위원장 등 거



취 문체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호남의 시·도민들에 대해 끝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냈으나 민주당은 자만에 빠져 이를 외면한 정치를 펼쳐왔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나서서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의 감으로 행세하며 정체를 해왔다"며 "이제 지역민들에게 시·도지사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정책연구원장 시절 '뉴민주당 플랜'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뉴 광주·전남 플랜' 만들기에 착수했다"며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향후 10~20년 호남 발전 구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의원은 오는 25일 지역 출신 학계·재계 인사들을 초청, 전남 발전 방안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7월에는 광주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지구당위원장 등 거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與갈등' 잇단 파열음

경제민주화 입법·진주의료원 등 핵심쟁점 이견

새누리당 내에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 진주의료원 폐업, 군가산점 등이 문제의 쟁점들. 이에 대해 당권파와 채신파, 지역 또는 성별로 나뉘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내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의원총회는 대표적 여여 갈등의 표출장이 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그동안 당내 경제민주화 관련 속도조절론 혹은 신중론에 밀려 궁지에 빠져들던 김성태 의원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방'을 발의한

이종훈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실모 법이 너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합리적이며 센 게 아니라 핵심을 짚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산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민 의원도 "대기업의 경제적 지배력은 더욱 강화하는데 이것을 푸는 매듭이 금산분리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신중론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도 '일감몰아주기 근절법'과 관련, 총론적 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각론에서 디테일한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은 남양유업방지방에 포함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실효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해법도 의원들 간 온도차가 크다. 친박계 위주의 당 지도부는 이쯤 되면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 지역(경남) 국회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도의 결정에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군가산점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상임위 간 충돌로 치달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가산점제가 위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복무자에게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개혁연대' 제안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했고 문재인 당시 후보와 공동으로 합의했다"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의원과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안 의원) 얘기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안 의원)의 심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구체적 비전

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의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최고책임자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여야 정쟁으로 치부하며 방관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이 '국정원 직원 매수에 의한 공작'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공명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선거 관여·당비대담 등 집중단속

광주시 선관위, 지방선거 범죄 예방나서

내년 6월4일 치러질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범죄 예방 및 집중단속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범죄와 당비 대담을 통한 불법 당원모집 행위, 금품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18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법위반 예방활동 및 지도·단속을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광주시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과 각 구 위원회 지도계장들이 참석했다.

시 선관위 차의환 지도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예방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공무원이 현직 단장·유력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당비 대담 등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제보 사항이 있으면 선거콜센터 1390번 또는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